

# 전남 국립의대 설립방식 '1대학 2병원 신설' 확정

용역사, 동·서부 대학병원 신설안 정원 200명 내외·1곳 600병상 규모 미추천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지원 대학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 검토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공모, 설립방식 추천안으로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 지역에 2개의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양 대학이 협약서 등을 통해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에 합의하면, 설립방식선정위원회가 '공동의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설립 공모'와 '공동의대' 등 두 트랙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추천대학 선정·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12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추천안을 발표했다.

추천안은 도민공청회 6회, 여론조사, 대학설명회 등 대학, 도민,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립방식 선정위원회에서 6차례 논의 끝에 마련됐다.

최종 선정된 방안은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 지역에 2개의 대학병원을 신설 또는 동시 설립'하는 방식으로, 의대 입학정원은 2026학년도 타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의대 정원 규모를 고려하되, 지역의 의료인력 수요를 감안해 200명 내외로 결정했다.

대학병원은 1000~1200병상 규모로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설립하되, 병원별 구체적 규모는 대학에서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각 대학병원도 양 지역 특성에 맞춰 특화 진료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소요예산은 1000병상 기준 약 7000억원 가량으로, 타 대학병원 신설 사례 등을

적용해 통상적으로 국가가 20~25%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한다.

에이티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는 소요예산과 관련해 "전남도에서 대학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병원 설립비용의 30% 수준의 예산 지원을 제시했다"며 "2개 대학병원 신설로 커지는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후 전남도에서 정부, 도의회, 대학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추가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추천 대학 지원 대책으로는 의대에 비금가는 수준의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첨단의과학연구센터는 의과대학·대학병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AI기반 의학, 디지털 트윈 등 첨단의 과학분야 연구·교육·실습과 의료바이오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미추천 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은 대학 선정 후 지역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지역 정치

권에서 제안한 '공동의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1도 1국립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추진에는 양 대학의 의사를 빠른 시간 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대학에서 협약서 등을 통해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에 합의하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설립방식선정위원회 선정 방식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공동의대의 경우 양 대학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통합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2개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역사는 끝으로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용역 종료시까지 설립방식과 미추천 대학·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계속 논의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대학, 전문가 등 지역에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도

민 모두가 바라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실시한 설립방식 적합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 54.6%가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 지역에 2개의 대학병원 동시 신설'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45.4%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동일지역에 설립'을 선택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현재 사전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시, 목포시, 화순군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도민공청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용역기관은 10월 중순까지 목포대와 순천대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10월 말까지 의대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으로, 순천대의 공모 참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 김 지사 "정부 '쌀·한우 수급 안정대책' 유감"

쌀값 20만원대 유지 등 촉구 한우농가 사료 무이자 요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증장기 발전대책'과 관련해 쌀 재고량 대책이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쌀값 최소 20만 원대 유지·한우가격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쌀·한우 수급 대책에서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쌀 10만 톤 이상 사료용 사전 격리 △10~11월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추가 격리 △벼 재배면적 조정 △2025년 사료 구매자금 1조 원 유지 △삼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한우산업 증장기 발전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에 김 지사는 "쌀·한우가격 상승보다는 폭락을 막기 위한 수준의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쌀·한우가격 안정화 정부대

책 촉구 건의서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확기 전, 2023년산 민간재고 물량에 대해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용으로 선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2023년산 쌀 재고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 농협RPC 등이 저가로 방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2024년 신곡 쌀값 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RPC의 2024년산 신곡 매입 물량 축소, 매입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농가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2024년산 신곡의 경우에도 10만 톤이 아닌 40만 톤 규모의 시장격리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우값 안정화를 위해선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상환기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연장 △노후 저능력우도태 장려금 및 미경산우 출하 장려금 지원 등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벼 재배면적 및 생산



광주 민·군공항 통합이전 기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12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 민·군공항 통합이전 현황 설명회에서 통합이전 기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량이 전국 1위인 쌀 주산지, 지금 중요한 현안은 쌀값과 한우값 정상화"라며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으로 시장에 긍정

적 신호를 줘야지만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산 농가가 소득 감소와 생산

비로 인한 경영난 등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 Yes & true balanced ]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